



전주매일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음 10월 10일) 제33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00만 전북인,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한마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의지 재확인

김관영 지사, "도민 체감
전북특자도 변화 약속"

도민지원단 첫 활동으로
법안 통과 건의문 발표

전북인들이 국회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21일 전북도, 전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이하 국민지원위)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민지원위 이연택 총괄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 도내 시장·군수 11명, 국민지원위원 등 도내의 인사 6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전북인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응원했으며, 정세균 국민지원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전북특별법 제정부터 올해 전부개정안까지 여·야를 대표



21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염원을 위한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이연택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 등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발의해 준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북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과 16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줬다.

김관영 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 올해 실제 전북에 필요한 특례발굴, 전부개정안 마

련,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국회 행안위 1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상태를 전했다.

이울러,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이자 감점을 담은 특례들을 설명하며 전북의 변화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발족해서 200명이 넘는 규모로 운영돼 온 국민지원위 내부에 별도 기동력을 갖춘 50명의 도민지원단이 위촉됐다. 이들은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국

회에서 조속히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담은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 건의문'이 국회에 올려 퍼졌고, 이어지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와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인의 염원과 의지를 알렸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지사는 "그동안 도민, 지역정치권, 전문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주고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특별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시작인 만큼,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하고, 더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와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인의 염원과 의지를 알렸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와 23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전부개정안에 담긴 핵심특례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김재훈 기자

올 자치경찰사무 평가
완산경찰, 최우수 선정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심의서
분야별 높은 점수 받아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21일 제8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내 시·군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항에 따라 추진되며, 자치경찰사무 관사 평가와 경찰서장 평가로 이뤄진다.

관사평가 결과 전주 완산경찰서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완산경찰서의 '무인ATM기 시민감시단' 운영, 익산경찰서의 여성대상 범죄 및 스토킹 예방 플래시몹 '순찰 하·담' 사례 등이 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덕진경찰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운영, 군산경찰서의 시기별 주요테마를 지정한 대상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등이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완산경찰서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돋보였다.

그 밖에 모든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경찰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였다.

경찰서장 평가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시책 추진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시책인 '24시간 안전한 아동종합계획 추진 성과'와 '자치경찰체 홍보 활동' 2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4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 완산·덕진·익산경찰서장이 최우수(S등급)로 선정됐으며, 완산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활동강화(캠페인·교육·시설개선)를 통한 정책효과를 명확히 나타내면서 사업의 적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덕진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원스톱 캠페인 사업 등에 적극 협업한 부분이 우수사례로 평가됐으며, 익산경찰서장은 초등학교 주변 불법시설 설치, 청소년 통합사례 관리·지원 추진 등 자경위 시책을 타기관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김재훈 기자

도,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우수'

전북도가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시행한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2년에 추진한 150개의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과제(17개)와 기본과제(133개)로 나눠 평가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있다.

전북도가 수립한 2022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에는 1개의 대표과제와 16개의 기본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사회적 배려 계층 밀착형 소비자교육 등서 높은 평가

이중 7개 '매우우수', 10개 '우수' 등 모든 지표가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1372 분당해결의 전 문성 강화' 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소비자정책 기본과제들을 충실히 추

진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행된 기본과제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관심 및 노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동안 전북도는 소비자정책을 확

발히 추진해 온 결과로 특히 고령자, 어린이, 다문화이주여성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대상별로 인형극을 통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순회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상담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울러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선도적으

로 운영해 2만2,105개소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을 인정받았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적극적인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